

경찰의 역할과 특징:  
경찰관은 다른 정부 공무원과 차이

2

경찰행정학개론

# 강의 참고 교재

- 경찰청. <경찰백서> (2024, 2023)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강용일, 김석범, 박창헌, 이종화. <경찰학개론 I> (경찰공제회)
-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 김상호 외 공저. <경찰학개론> (법문사)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 이철호. <경찰행정 전공노트> (21세기사)
- 홍정선. <신경찰행정법입문> (박영사)
- 김택. <경찰학의 이해> (박영사)
- S. Walker and C. Katz. <The Police in America>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판례·유권해석 다 '무죄'라는데 군포서는 계속 수사>

군포시청 건축과 광고물 팀장으로 일하던 박 모 씨는 발령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다른 부서 평직원으로 발령 났다. 각 정당이 아무 데나 걸어 놓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철거한 직후였다. '인사 불이익'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려다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지난 5개월 동안 박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한 이후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무보직 발령' 난 것이 인사 불이익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소청과 언론 제보 등 문제 제기를 준비했다. 박 씨는 정책감사실에 제출했던 현수막 단속 관련 경위서를 평소 알던 기자에게 줬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 내용을 살펴본 이 기자는 박 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료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공유했다. 이 기자는 "내용을 읽어보니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위서에는 시청에서 생산한 문서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모두 박 씨의 현수막 단속 과정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이었다. 정당 현수막의 불법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 법무법인 3곳에서 받은 법률자문, 군포시가 각 정당에 보냈던 공문 등이었는데, 모두 '복사본'이었다. 경위서가 여러 기자에게 공유된 사실을 뒤늦게 안 박 씨는 처음 경위서를 줬던 기자에게 자료를 돌려받았고, 경위서를 받아본 기자들에게 취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 일은 군포시청이 알게 되면서 '사건화' 됐다. 군포시는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군포시가 징계 절차를 막 시작했을 무렵인 지난해 11~12월쯤 군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이 관련 내용을 첩보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서 첩보를 생산하는 부서는 정보과이다. 경찰은 내사 중이었던 지난달 초 박 씨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공공기록물법 유출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군이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고발 접수 이후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를 거치는 사건에서 피의자 입건은 의미가 좀 다르다.

<기사: 계속>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를 거치는 사건에서 피의자 입건은 의미가 좀 다르다.

경찰이 내사 이후 입건하는 경우는 ①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거나, ②혐의가 있다고 1차 판단을 내렸을 때, 2가지로 보면 된다. 내사 단계에서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내사 종결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유출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경찰청의 법률 자문을 보면 복사본을 유출한 박 씨 사건에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죄라는 의미다. 법원 판례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처벌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라고 보고 있다. 기록물 유출을 처벌하는 취지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의 보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교원 평가 내용 복사본을 유출한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원도 복사본을 유출한 사건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건축 관련 원본 서류철을 유출한 사건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법무부도 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다. 공공기록물법 처벌 조항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원본이고 복사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사본을 유출했다고 해도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의 법률 자문도 법무부 유권해석을 따르고 있다. 일선서 수사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경찰청 '현장법률 365'의 답변을 보면, 복사본에는 공공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 판례, 법무부 유권해석, 경찰청 법률 자문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군포경찰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박 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본인이 쓴 경위서를 단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고, 그 경위서에 시청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경위서가 여러 기자에게 퍼진 건 박 씨의 의도가 아니었다. (KBS, 2020)

### <어르신 교통사고를 막아라...경기북부경찰, 전방위 활동>

경기북부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의 대대적 홍보와 위험 지역 반사지 부착 작업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2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어르신이 보이면, 일단 멈춤!', '어르신 교통안전, 내가 지킨 보행 신호부터!' 두 가지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안전 교육 전담팀 경찰관들이 홍보부스에서 시민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비가 올 때 운전자의 눈에 띄기 좋은 밝은색 우산 사용에 대해 홍보하며 경기북부경찰이 특별 제작한 신호등 색 우산을 나눠주기도 했다. 온라인 홍보활동도 진행됐다. 경기북부청과 함께 일산서부서, 의정부서, 고양서가 함께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나의 다짐 댓글 달기 이벤트', 'SNS 해시태그 이벤트' 등 릴레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약 1천 400여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자', '운전 중 어르신이 보이면 멈춰야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반사지 부착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경찰과 대한노인회가 함께한 어르신 교통안전 다짐 대회 전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실제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도 하반기 들어 감소 추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은 본격 활동을 시작한 5월 21일부터 최근까지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상반기 56.4%에 비해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2019)



# 경찰이란?

- 사전적 의미
  -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기반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장애의 제거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국가작용이다.
  -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탈적인 사람을 제어하는 폭력이나 강제력이 공권력 혹은 경찰권이다.
- 경찰개념의 유형
  - 실질적 의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활동 (교통경찰, 철도경찰, 위생경찰 등)
  - 형식적(제도적) 의미: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경찰법 3조 (6가지 조직의 목적) 등.
- 경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
  - 범죄관련 영화에서 경찰의 활동 (범죄를 척결하는 정의 사도?)
  - 신문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활동 (시위 진압, 범죄 수사, 부패와 인권 침해, 법 집행의 정당성 비판 등)
  - 주변 경찰 친인척의 존재 혹은 경찰서에서 직접적인 경험, 등

# 경찰 순찰 (순찰차)

- 경찰은 주민의 안전, 질서유지, 범죄통제를 사전에 예약 없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순찰 활동을 한다.
  - 경찰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의 임무는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이 순찰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다양한 목적에 따른 경찰차량 도입은 순찰 목적, 고속도로 암행 순찰, 긴급대응, 교통순찰, 감시 및 정보수집, 시위 진압, 폭발물 제거 등을 주된 목적을 둠.
  - 일선 경찰 순찰차의 목적: 사건 현장에 경찰관의 신속한 이동, 용의자의 이송과 임시 격리, 순찰, 범죄 예방 등
- 순찰의 유형은 차량순찰, 도보순찰, 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등이 주된 방식이지만, 기마 순찰, 인라인 순찰 (롤러스케이트 혹은 1인 전동스쿠터 등) 등 다양한 수단이 활동
- 경찰 차량은 경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장비 설치
  - 경광등(beacons 혹은 lightbars), 범죄기록, 범죄자 이송, 과속 추적, 순찰 등에 필요한 장비
-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 등을 숨겨 놓고 법규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하는 차량이다. 이날부터 경부고속도로(양재IC~신탄진IC)에서 1차 시범운행을 시작했음(2016).
- 충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국도에서 암행순찰차 운행.
- ‘드론 순찰’ 방식이 도입되어 (2023년 시범운영), 치안 사각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순찰활동을 적극 실시. 과거에는 인명 구조와 수색 혹은 재난과 테러 대비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였으나, 순찰 목적으로 도입 (2024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장치 운용규칙 등 개정)

- 순찰활동의 3가지 목적
  - ① 범죄억제(Crime Deterrence) : 경찰이 언제 어디든지 존재하여 잠재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② 공공 안전감(Public Safety) : 경찰활동(순찰)이 가시적으로 주민에게 띄면서 심리와 정서적인 장정감을 줌.
  - ③ 시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경찰이용가능성(Availability) : 경찰관이 관할구역 전역에 편재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시민이 쉽게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전기 배터리로 운영되는 경찰순찰차는 1899년 미국에서 최초 등장.
  - 미국의 911 신고에서 전체 71% 정도가 범죄와 상관이 없고, 29%만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찰순찰의 84%가 차량순찰, 4% 도보순찰, 5% 오토바이 순찰, 나머지 5% 도보 등의 순찰
- 1972년 캔사스시 순찰실험 - 획기적인 차량순찰의 효과 검증. 순찰의 범죄 예방 효과 없음/ 시민의 안전감 영향 없음/ 시민 생활에 영향 없음
  -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소수 인종 소요 사태, 범죄 발생 건수 증가로 순찰활동의 효과에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순찰의 효과 실험이 이루어짐.
- 이후 순찰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있었고, 그 결과는 순찰의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경찰활동이 도입됨.



- 순찰차의 용도 (지구내, 파출소)
  - 관내 순찰, 사건 대응, 피검거자 호송, 주요 목표물 검문, 고장차량 지원,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 교통 사고 처리, 대간첩/대테러작전 지원
- 경찰차는 용도에 따라 (1) 일반순찰차 (2) 교통순찰차 (3) 고속순찰차 (4) 경호순찰차 (5) 형사순찰차 등으로 구분.
  - 일반순찰차는 대민 지원 업무가 중점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주로 사용.
  - 교통순찰차.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운용하는 차.
  - 고속순찰차.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용하는 차.
- 2011년 이후, LED경광등, HID 서치라이트, 전/후방 카메라 및 외장하드형 디지털 녹화장치 등이 장착되어,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크게 강화했음.
- 도로교통법. 제48조의 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4) 경찰순찰차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경찰관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을 허용
- 긴급자동차의 대상 (도로교통법)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용 긴급자동차

# 경찰의 서비스 활동

- 경찰은 시민에게 도움을 준다.
  -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 교통정보제공/ 인명구조,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범죄 예방 순찰활동)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예방적 조치들이 서비스적 활동을 의미함. 그러나 처음부터 위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서비스 활동(예, 교통정보 제공) 등도 포함.
  -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이 안녕 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 일반적 위험방지 수단 - 경고, 억류(위험장소 출입제한) 또는 피난(위험지역 도피),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접근 또는 통행 제한과 금지)

• 「도시지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에 첨단 교통정보 수집·제공 시스템(UTIS)을 기반으로 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광역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2013년 충남 당진에서 외출을 한다며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아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수사의 단서가 없어 찾지 못하던 지적장애인 양某씨(54세)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토대로 탐문을 시작해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과 생활하던 양씨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실종자에 대한 수색·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찰의 범죄 수사

- 경찰은 범죄를 해결한다
  - 위험방지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범죄수사 (범죄해결) -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재량이 없음.
-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수사본부
-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 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형소법197조)
  - 수사의 단서: 내사(범죄에 대한 내사의 필요성), 피해신고, 변사자의 검시, 범죄인지(범죄 혐의), 고소, 고발, 자수 등
  -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 195조)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경 협력조항을 신설하여 두 기관을 ‘명령 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대등한 관계로 설정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설정
- 위험방지(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등)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대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 범죄 예방, 진압, 수사

# 경찰의 교통통제

- 경찰은 교통위반자에게 티켓 (tickets)을 발부한다.
- 교통경찰. 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 교통경찰활동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교통 정체의 해결과 안전의 증대
-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
  - 위험방지과 관련해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자동차의 속도 제한/ 횡단 등의 금지/ 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함
-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예,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정지, 취소할 수 있음

# 경찰의 체포권한

- 경찰관은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
  - 체포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일정한 시간 동안 피의자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
-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않는다”
- (제3항).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불심검문: 수상한 행동이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법치주의: (형식적 의미)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릴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실질적 의미)정의의 이념에 근거하고 정의의 실현을 추구 하는 국가원리. 법치주의는 경찰행정에도 적용됨.



## 경찰의 무기 사용

- 경찰은 공권력(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진압봉, 총기류, 수갑 등)을 사용한다.

-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함.
- 경찰장구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줄,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함. (족쇄는 포함되지 않음)
  - 사용 요건: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사용 가능)
- 무기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을 말함. 입법례에 따라서는 무기를 곤봉, 권총, 리볼버, 소총, 기관총, 기관소총, 수류탄으로 정의하기도 함.
  -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사용 불가능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 11월 시행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제정안 <small>※6개월의 경과기간 거쳐 11월 중에 시행</small>				
대상자 행위	사용가능		경찰관 대응 수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름	순응	협조적 통제	수갑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언어적 통제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 가하지 않음	소극적 저항	접촉 통제	경찰봉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 극히 낮은 물리력 -잡기, 밀기, 끌기
공무집행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음 -손을 뿌리침, 밀고 잡아끌, 경찰에 침을 뱉음	적극적 저항	저위험 물리력	분사기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 낮은 물리력 -관절 꺾기, 조르기, 넘어뜨리기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 가함 -강한 힘으로 미는 등 완력 사용해 체포회피	폭력적 공격	중위험 물리력	전기 충격기	대상에게 부상입힐 수 있으나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 낮은 물리력 -신체부위, 경찰봉 이용한 가격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총기류, 흉기, 둔기 이용해 위력 행사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 등	치명적 공격	고위험 물리력	권총	대상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권총, 경찰봉·신체적 물리력으로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 등



# 법 집행기관으로써의 경찰

- 경찰, 지방자치경찰, 해양경찰, 전/의경, 검찰은 모두 법집행자(law enforcement)이다.
- 법집행이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과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을 파악, (범법)억제, (처벌 후 사회) 정상 복귀, 처벌함으로써 법을 강제로 집행하는 조직 혹은 그 구성원들을 의미함.
- 법집행기관의 범위는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국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 미국의 경우, 국경수비대, 보안관, 세관, 교도관 등이 포함

- 2014년 경찰에 입건된 국가 공무원 3명 중 2명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의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2,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세자릿수 입건자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등 법 집행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이 모두 1,522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4.7%에 달했습니다. (연합, 2015/8/30).



# 지역사회와의 협력

- 경찰은 지역사회 (혹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현대경찰행정의 패러다임에서 핵심적 기초이다.
  - 경찰은 지역의 요구, 바람, 기대를 최우선 반영하여 경찰활동을 하고, 효율적인 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 봉사경찰: 경찰활동의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이 아니라 계몽, 지도, 서비스를 통한 법집행 (청소년 선도, 교통안내, 방범순찰, 재난구호 등) - 질서경찰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사무로서의 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유지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 각 지역에 적합한 경찰 조직을 갖출 수 있음. 지역을 잘 아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국가의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점.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분야에서 치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
  -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는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 이를 위해 정기조사와 정책모니터링을 수행.
  - 정기조사: 체감안전도, 치안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관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 체감안전도는 지역별로 일반국민이 느끼는 안전수준을 조사
  - 치안고객만족도 : 민원, 112, 교통조사, 수사 분야에서 치안 서비스를 접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
- 정책모니터링 : 주요 치안정책의 현안 및 쟁점 사항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조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 특히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시행 전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행 후 효과를 분석/환류 하는 등 치안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

# 한국경찰(Police)의 발전

- 경찰과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
  -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활동과 권한
  - 사회의 발전과 변화로 경찰과 다른 정부기관(사회복지, 생활 질서 등)과의 업무 조정과 경계
- 21세기 경찰과 과거의 경찰 차이
  - 위험방지와 위험의 사전예방
  - 권력 집중의 견제(경찰력의 집중)과 인권 보호
  - 주민과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 경찰활동의 국제 협력과 공조 (테러, 국제범죄, 사이버위협)
- 한국경찰과 다른 국가 경찰과의 차이
  - 국가경찰조직(중앙화)과 자치경찰조직(분권화)
  - 남북한 분단과 권위주의 정부의 영향